

금융위원장 모두 말씀

2017. 8. 2.

금 용 위 원 회

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 추진배경

- ☐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
 - 서민·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,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- ☐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.
 - 또한,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부채가 누증되면, 단기적인 소비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.
- 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·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취지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번 방안에서 금융분야 대책으로 포함된 내용은

-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
LTV·DTI 한도를 각각 40%로 낮추고,
- 주담대를 여러 건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
LTV·DTI 한도를
추가로 강화*하겠습니다.

* 1건 이상 주담대가 있는 세대가 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 실행하는 신규 주담대는 지역에 관계없이 LTV·DTI를 10%p씩 축소

- 이번 대책은 직접적으로는 해당지역 주택가격을
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
금융회사 입장에서 담보가치 안정을 통해
대출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.

□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금융업계 CEO 여러분들의
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2 당부말씀

<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 >

-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
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
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가 중요합니다.

① 우선,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
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
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
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6.1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금융권의 협조로
대책 발표 후 행정지도가 시행된 7.3일 전까지
대출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
※ 6.19 대책 발표 전후 주담대 일평균 증감 추이(영업일 기준)

은 행 : (6.1~6.18) 0.20조원 / (6.19~7.2) 0.21조원
2금융권 : (6.1~6.18) 0.03조원 / (6.19~7.2) 0.02조원

- 이번 대책도 은행장님들과 협회장님들께서 직접
금융회사 본점 뿐만 아니라 창구까지
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
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② 아울러,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
직원 교육, 전산시스템 구축 등
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③ 협회장님들께서는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
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
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
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·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는 한편,
-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
금융권 준비사항,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
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 강화 >

-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하여
-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시중자금이 가계대출, 부동산금융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
- 우리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.
- *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(% 한은) : ('98)27.7 → ('16)43.4 [+15.7%p]
-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.
-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,
- 금융제도·시스템의 유인체계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

-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,
- 우리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, 필요한 방안은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우선,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(DSR)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중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.
- 또한,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외의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수 있도록
- 업권별 자본규제 등 금융제도를 재정비하고,
- 정책금융이 생산적금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, 8월중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인 만큼,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마지막으로,
-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.